

02

FTA EXPERTS

- ①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협력
- ② 향후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통상 대응 방안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협력



이재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

※ 이 기고문은 개인의 의견으로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일방에 집중된 핵심광물 공급망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이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이차전지, 특히 전기차 배터리를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면 핵심광물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총량이 33.8kg에서 206.9kg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광물의 수도 크게 2가지 수준에서 7가지 수준으로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된 핵심광물 공급망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효율성에 바탕을 둔 저렴한 광물 공급이라는 혜택보다는 공급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 것이다. 공급 교란의 원인은 채굴 중인 광산의 부족, 광물 자원의 품질 하락 등도 거론되지만 한편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균형적으로 일방에 집중되면서 비시장적, 즉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균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모습은 어떠한가?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의 글로벌 생산량을 살펴보면 상위 3개국이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배터리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흑연을 보면 채굴은 중국이 82%를 차지하고 있고, 제련 및 정제는 무려 91%에 달한다.

주요 핵심광물 상위 3개국 비중(2023년)

	채굴	제련 · 정제
리튬	호주(43%), 칠레(24%), 중국(18%)	중국(65%), 칠레(26%), 아르헨티나(5%)
니켈	인도네시아(52%), 필리핀(11%), 뉴칼레도니아(6%)	인도네시아(37%), 중국(28%), 일본(5%)
코발트	DR콩고(65%), 인도네시아(8%), 호주(3%), 러시아(3%)	중국(77%), 핀란드(8%), 캐나다(3%)
망간	남아공(36%), 가봉(23%), 호주(17%)	중국(90%)*
흑연	중국(82%), 모잠비크(6%), 마다가스카르(4%)	중국(91%), 일본(6%), 미국(1%)

자료: 망간을 제외한 핵심광물은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4 p. 266-274; 망간 생산 비중은 USGS 2022년 추정치; 망간 제련 비중은 S&P Global(2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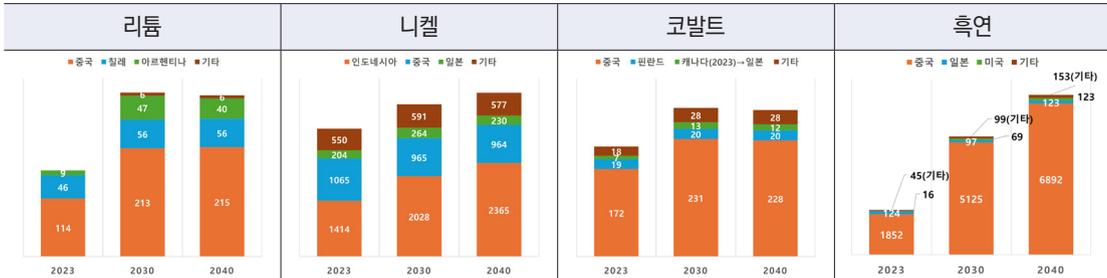
*망간 제련 · 정제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상위 1개국만 표기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핵심광물 공급망이 203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방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예컨대 흑연의 경우 중국 가공량이 전체 가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90%에서, 2040년 95%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배터리 관련 주요 핵심광물 3대 공급국(가공 기준)

(단위: 천톤)



자료: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4, p. 262-274; 동 보고서 상 우리 전략핵심광물인 망간 관련 데이터 미흡

일방에 집중된 공급망 구조를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균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아닌 안보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WTO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가 약화된 상황에서 공급국이 국내 생산 차질이나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경



쟁 심화에 있다. 국가 간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공급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수요국은 공급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일단 안보적 위협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정치에서 핵심광물의 무기화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특히 배터리 관련 핵심광물 중에서도 흑연, 니켈 등이 경제적 위험보다는 지정학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IEA 선정 주요핵심광물의 공급 및 지정학적 위험 수준

	공급 위험 수준	지정학적 위험 수준
흑연	낮음	높음
니켈	낮음	높음
코발트	보통	높음
희토류	보통	높음
리튬	높음	보통
구리	보통	낮음

자료: IEA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4, p. 214; 216

2.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경쟁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수요국과 공급국은 경쟁 국면에서 있다. 우선 수요국은 일방에 집중된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EU, 일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국가안보 강화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리더십 회복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13817호와 13953호를 통해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관세 및 쿼터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기 100일 공급망 보고서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핵심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청정에너지를 추가하였다.

둘째, EU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유럽핵심원자재법을 승인하였다. EU는 핵심광물 확보 문제에 있어서 특정국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de-risking)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희소금속의 전략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중요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대책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



원기구(JOGMEC)의 출자·용자·채무보증을 위한 리스크머니 공급 지원 및 자원탐사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해양에너지·광물자원개발계획에 의거 영해·배타 적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한편 공급국인 자원부국은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우선 중국은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전국광산자원규획을 시행하면서 광물정보 플랫폼 구축, 탐사 확대, 통계 규칙 제정, 외국기업 개발 제한, 정보보안 강화 등 핵심광물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내 광물 산업을 개발하면서 고부가가치 부문을 육성 중이다. 2020년 신광업법을 개정하면서 자국 내 제련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하였다. 제련소 건설 의무를 미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핵심광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 핵심광물 공급 다변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

이처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변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과 기회도 커지고 있다. 각국이 국익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핵심광물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국 중심으로 형성된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이 대표적 협력 사례이다. MSP는 안정적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를 위해 2022년 6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14개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과 EU가 참여 중이다.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MSP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MSP 시범사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MSP 회원국 간 협력을 주도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협력의 혜택은 매우 많다.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s)을 통해 공급국에 수요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와 같이 핵심광물을 최종 사용하는 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수요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여 핵심광물의 전략적 비축도 모색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광산업 분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 요구 및 투자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다변화 노력은 기존의 FTA와도 관련이 있다. 수요국이 FTA를 적극 활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IRA를 통해 FTA 체결국과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아르헨티나 등과 별도의 협정도 체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FTA를 적극활용해 가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광물 다변화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자와 양자 협력을 촘촘하게 얽혀가면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할 때다.





향후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통상 대응 방안



최영미 교수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들어가며

2018년 트럼프 정부 아래 발발한 미-중 무역 분쟁은 세계 통상 환경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 아래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과 공급망(supply chain)은 부분적으로 붕괴하였다. 이에 기존 시장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던 미국, 유럽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는 비용 감소와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던 세계화에서 자국 경제 보호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혹은 조정된 세계화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화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2024년 11월 대선의 향방이 세계 경제 및 통상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3개월 앞둔 지난 7월 21일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그 뒤를 잇는 미국 대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 및 세계 경제 질서의 향방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11월 대선 결과에 크게 관계없이 미국은 보호주의 통상 정책의 기초를 당분간 유지 및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 아래 미-중 간 무역 긴장은 지속되고 특히 기술과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아래 수입품에 부여된 대규모 관세와 NAFTA, 한미 FTA 등의 재협상된 무역 협정의 조건들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두 정당 모두 중국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 및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큰 이견이 없으며, 다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보호무역의 수준 및 동맹의 구분 여부라 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동맹 및 비동맹의 구분이 없는 양자적이고 공세적인 접근을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네트워크 위주의 노동, 환경 등의 문제와 통상을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무역 표준 수립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그리고 새로운 해리스 행정부에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통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2. 미국 양 정당 후보의 통상 정책

공화당 트럼프 후보: 제 2의 무역 전쟁(Trade War 2.0)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집행 2기에서는 더욱 공세적인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제 1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에게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제 2의 무역전쟁의 발발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를 강조하는 위험 최소화(de-risking)를 넘어 중국과의 경제 단절을 의미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재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는 상대적으로 동맹과 비동맹에 구분을 두지 않고 양자적 수단을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현 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 아래 인태 지역에서 높은 무역 표준의 수립, 공급망 안정, 투명한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수립을 위해 체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제 2의 TPP’라 비판하며 TPP와 마찬가지로 재집권 시 즉각 폐기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세금 인센티브 역시 비난하며 이에 대한 전면 폐지 가능성을 밝혔다.

트럼프 1기에서 추진된 관세 인상 위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었음에도, 트럼프는 2기에서 더욱 공세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전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고, 수입 대상을 변경하였을 뿐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동맹국과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관세 인상 계획은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비록 중간재의 가격 상승을 부분적으로 유도할지라도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그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어떻게 상호호혜적 대우(reciprocal treatment)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중국이 많은 주요 시장을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관세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 통상 영역의 확대

상대적으로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해리스는 트럼프에 비해 구체적인 통상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 간의 정치적 행적으로 보았을 때,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skepticism) 및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통상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 아래 진행된 USMCA 협정이 노동과 환경에 대한 보호 조항들을 추가하고 있어 많은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10명의 상원위원 중 한 명이었다. 또한 TPP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법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TPP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해리스는 노동·환경·인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 통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해리스는 양자적 방식보다는 동맹 네트워크 위주의 다자적 방식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4 민주당 정강의 9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서는 IPEF,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아메리카 경제 번영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개발과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밝혔다. 또한 EU, 인도, 싱가포르, 한국 및 여타 파트너들과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의 수립을 통해 글로벌 기술 혁신과 이에 대한 공통 규범 제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지적재산, 개인정보 보호 등의 기술 산업 관련 문제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통상 문제에 포함시켜 통상 영역의 질적 그리고 양적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바이든에 비해 해리스는 동맹국 혹은 우



호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청년 진보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통상 정책’ 보다는 ‘노동자 정책’을 주로 사용하는 진보적 좌파들에게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을 의미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국내 투자는 환영할만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FTA와 같이 협정문 기반이 아닌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개의 필라를 포함하고 있는 클럽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IPEF 협정 중, 필라 2인 공급망은 빠르게 추진되어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기발효되었고, 필라 3 청정경제와 필라 4 공정경제 역시 2024년 타결되었으나, 필라 1 무역 분야는 타결 직전 미국이 요구한 환경과 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반대하면서 타결 직전 합의가 무산됐다.

중국 경제를 견제하는 방식에서도 해리스는 트럼프의 공세적 관세 부과 방식보다는 동맹 혹은 경제적 우호국 간 높은 수준의 무역 표준 설정 및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의 중국 수출 및 접근 제한 등의 기술 경쟁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배타적 전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4 민주당 정강에 따르면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서의 중국과의 경쟁은 갈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관리와 동시에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 역시 암시하고 있다.

표 1 공화당 트럼프 후보 vs. 민주당 해리스 후보 통상 정책 비교

	트럼프 후보	해리스 후보
통상 목표	보호무역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 및 미국 제조업의 부활	
보호무역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 -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 상호무역법 제정을 통한 보복 관세 -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수준의 무역 표준 수립을 통한 배타적 전략 - 노동·환경·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통상의 양적, 질적 확대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통상
통상 접근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주의 -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목적으로 제 2의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 - IPEF, IRA 보조금 철폐 등 미국의 이익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주의 - 중국 경제와의 디리스크를 위한 다자적 동맹네트워크 활용 - IPEF, IRA 유지 및 확대 등 우호국 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3. 미·중 경제 및 통상 관계의 현황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은 보호무역주의 및 대중국 견제 방식을 점차 수렴해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 진영의 차이는 그 수준과 접근 방식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기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번 11월 대선의 향방을 결정 지을 것이다. 특히 유권자의 통상 분야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커플링으로 대표되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팅으로 대표되는 동맹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견제가 미·중 경제 및 통상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먼저,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비해 2023년 그 격차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중국의 그것이 급속히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0년 10.6%의 경제성장률의 기록한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 부진, 내수 시장 침체,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등의 문제와 맞물려 2023년 5.2%의 성장률의 기록하였다.

이와 반대로 <그림2>의 미·중의 무역수지는 2010년에 비해 2023년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닌 미국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악화에 의한 결과이다. 2010년 5천3백2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미국의 무역수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22년 9천7백7십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12년 동안 약 80% 증가하였다.

그림 1 2010-2023 미·중 경제성장률(annual %)



자료: 세계은행

그림 2 2010-2023 미·중 무역수지(십억불)



미국 무역수지 악화는 주로 어느 국가와의 무역에서 기인하였으며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가?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2017년 미국의 제 1대 수입국이



었으나 2023년부터 멕시코에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캐나다에게 2대 수입국의 자리를 내어주며 3대 수입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2024년 중동 분쟁 등의 지리적 갈등으로 원자재와 부품 공급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요 생산기지의 지리적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전략적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기존의 NAFTA가 USMCA로 개정되며 변화된 교역 조건 역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미국의 10대 수입국

단위: 십억 불, %

순위	2017			2023			2024(상반기)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505	21.6	멕시코	475	15.4	멕시코	249	15.9
2	멕시코	314	13.4	중국	427	13.9	캐나다	205	13.1
3	캐나다	299	12.8	캐나다	421	13.7	중국	198	12.7
4	일본	136	5.8	독일	159	5.2	독일	80	5.1
5	독일	117	5.0	일본	147	4.8	일본	73	4.7
6	한국	71	3.0	한국	116	3.8	한국	67	4.3
7	영국	53	2.3	베트남	114	3.7	베트남	61	3.9
8	이탈리아	49	2.1	대만	87	2.8	대만	50	3.2
9	프랑스	48	2.1	인도	83	2.7	아일랜드	46	3.0
10	아일랜드	48	2.1	아일랜드	82	2.7	인도	44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또한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제 1대 적자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에서 확인했듯이, 대중 무역 적자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대량 관세가 미국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 증대를 이끌기보다는, 미국의 기업들이 단지 그들의 수입 거래국을 멕시코, 베트남과 같은 수입 관세가 낮은 국가들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혹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감소 및 미국 경제의 회복이었는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3 미국의 10대 적자국

단위: 십억 불

순위	2017		2023		2024(상반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중국	375,228	중국	279,424	중국	126,684
2	멕시코	71,057	멕시코	152,379	멕시코	82,081
3	일본	68,848	베트남	104,627	베트남	56,562
4	독일	64,252	독일	83,021	독일	42,114
5	베트남	38,320	일본	71,175	아일랜드	38,030
6	아일랜드	38,107	캐나다	68,253	한국	33,915
7	이탈리아	31,640	아일랜드	65,342	일본	33,837
8	말레이시아	24,583	한국	51,398	대만	30,123
9	인도	22,931	대만	47,975	캐나다	28,115
10	한국	22,887	이탈리아	44,012	인도	23,572

자료: 한국무역협회

4. 한국의 통상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

미국 경제 전반에 팽배해있는 반중국 정세로 인해 그 수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미국의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긴밀한 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경제에 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표적 통상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그림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의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 아래 2017년에 비해 2023년 68% 상승하였다. 2024년 상반기에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해온 중국을 근소하게 앞서며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8년 1,621억불에서 같은 해 가을에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 이후 2023년 23% 감소한 1,248억불을 기록했다.



그림 3 한국의 대 미·중 수출

단위: 억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 한국의 대 미·중 수입

단위: 억불



반면 한국의 대중 수입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인 2023년 최초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대미 무역에서의 흑자로 메워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한국은 <표3>에서 확인했듯이 2017년 미국의 10대 적자국에서 2024년 상반기 6대 적자국으로 그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7위의 일본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게 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의 구조적 변화가 과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긍정적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 한국은 어떠한 통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는 미국의 대선을 3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트럼프 당선 시, 최근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상호무역법에 의한 보복 관세와 10~20%의 보편관세는 가장 먼저 미국의 주요 적자국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등 14개국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 협의체인 IPEF 등은 백지화되고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한·미 FTA에 대한 또 다른 협상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USMCA의 75% 지역 가치 생산 요건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규정 관련 재협상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를 이용한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여타 적자국들이 잃게 될 미국 시장의 공간을 한국이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해리스 당선 시, 동맹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통상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무역 규범 수립 협의체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은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통상이 어떠한 무역 규범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당의 주요 세력인 진보적 좌파들이 향후 무역 협의체에 어떠한 노동 기준을 주장할 것이며 이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행정부단 독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 SEA)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IPEF와 같은 무역 규범 협의체의 국내 구속력 및 지속력을 위한 체계화된 입법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2010년 이후 통상은 경제적 효율성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의 주요 문제로 자리 잡았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가시화된 보호무역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G2 위주의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는 길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굳건한 경제안보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